

우리 업계 숙원인 가전 특소세 사실상 폐지



박재인
(본회 진흥담당 상무)

우리 「전자진흥」지는 지난 12월 편집위원회를 통해 새천년 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 1월호부터 「진흥칼럼」이라는 고정란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동란은 향후 우리업계가 총력체제로 전자산업 진흥활동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전자산업인 간 상호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아 중점 진흥과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이나 진흥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 또는 보람되었던 일 유감스러웠던 일 등을 수상형식으로 게재키로 하고 집필은 본회 진흥상무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이 그 첫 번째로 향후 이를 종합하면 전자산업 진흥의 이면사가 되도록 그 내용을 알차게 꾸며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편집자)

지난 1999년 12월 3일부로 컬러TV, VTR,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부과해 온 특별소비세제(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에어컨, 프로젝션TV, 벽걸이형TV 만들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공장도가격에서 특별소비세 15%와 교육세 45%(특소세율의 30%)를 합친 19.5% 만큼 내린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업계로서도 금년에 약 4.2%정도의 순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업계의 오랜 숙원이 22년만에 사실상 해결되고 나니 이에 얽힌 지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그 감회가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다.

특소세제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동 세율이 일정률로 부과됨에 따라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고 사치성 제품의 소비 억제를 통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시행되었다.

우리 전자제품은 근본적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사치성 제품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발전과 국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보급을 장려 해야할 산업이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다 더욱이 전자산업은 산업특성상 고도의 기술집약 산업이며 수출지향 산업인 관계로 국제 경쟁의 기반을 시급히 쌓아 가려면 초기에 수요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전자산업계는 처음부터 특소세제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자제품은 이 제도 도입과 동시에 흑백TV, 오디오 등 7개 품목이 그 대상이 되어 특별소비세(30~40%)에 방위세 등까지 포함해 총 간접세가 공장도가격에 52.9%내지 67.2%가 부과되었다.우리 업계 측면에서 보면 특소세제의 도입은 수요억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서 제조자가 공장 출하 단계에서 미리 세금을 납부 해야하므로 자금조달, 금리 부담에 보세 관리까지 받게 되어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율의 인하, 폐지를 관계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세수 보전 등의 이유를 들어 획기적인 개선을 하지 않자 우리 업계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부분적으로나마 세율인하를 도모해 왔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동 법률에 나와있는 탄력세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탄력세제란, 경기가 불황시 일정기간동안 기본세율의 30%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이 세제를 이용했던 적은 이른바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경기가 극심한 불황을 보였던 1980년 11월과 88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동년 3월 그리고 최근, 즉 IMF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 7월까지 모두 세 차례 걸쳐 이제도가 활용되었다.

두 번째 사례로는 1982년 1월에 있었던 것으로 대형제품과 소형제품을 구분하여 전력에너지 소모가 작고, 주로 저소득계층이 많이 구입하는 소형제품의 세율만 낮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도 유도하고 저소득계층의 세부담 경감도 배려하는 것으로 당시 전자공업 고도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컬러TV와 냉장고는 대형이 40%, 소형이 28%로 하였으며 오디오는 소형이 10% 그 외 기타(대형)는 30%로 차별화했다.

세 번째 아이디어로는 역시 1982년부터 시행한 이른바 잠정세율제로써 수출이 유망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신개발 품에 대해서는 초기 4년 동안은 기본 세율이 10%만 적용하고 그후 1년은 40% 또 그후 1년은 70%를 적용한 후 7년째에 가서 100%, 즉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우리업체가 제안해 전자산업에만 적용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한 아이디어로 VTR, 전자렌지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초기 4년간은 기본 세율 40%의 10%인 4%가 적용되고 그후 1년은 16% 또 그후 1년은 28%를 적용하다가 7년째에 가서 40%를 적용함으로써 구매 탄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에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수출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도 끊임 없이 새로운 세원 발굴로 그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 1979년 1월에 VTR, 1982년 1월에 TV영상투사기, 1992년 2월에 노래방용 오디오기기와 컬러 모니터를 신규 품목으로 각각 추가했으며 또한 과세 당국은 항상 겸용제품, 즉 AV기기와 TVCR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 세율이 높은 쪽으로 세율을 정해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국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자 우리 업체는 과세 당국에 대해 이제 가전제품은 더 이상 소비억제의 대상인 사치품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오히려 가사노동의 경감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국민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해 보급을 장려해야 할 품목이므로 이에 대한 특소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 와서는 여성 및 소비자 단체와도 연대해 특소세 폐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갔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도 과거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와는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가전제품 보급률이 100%에 이르러 생활의 필수품화 되었기 때문에 특소세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재정 형편상 점진적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989년 1월에는 최고 40%였던 제품을 20%~30%로 하고 28%미만의 제품은 15%로 인하하

였으며 또 1995년 1월에는 에어컨과 TV영상투사기만 25%로 하고 기타제품은 모두 15%로 조정하였다가 1998년 1월에 다시 에어컨과 TV영상투사기 세율만 30%로 인상해 오늘에 이르렀다가 이번에 국민의 정부가 국민 세부담의 형평성과 제품의 가치기준 변화 등을 고려해 에어컨(30%), 프로젝션TV(15%), 벽걸이형TV(15%) 등 세가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세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2년간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 및 폐지 활동을 둘러싼 당위성과 재미있는 일화는 너무 많다. 비근한 예로 '80년대 중반 우리 컬러 TV 대미 수출이 반덤핑 규제 조사를 받았을 때 국내 판매가격은 특소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높게 산출하고, 대미 수출 가격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가격으로 산출하므로써 그 차액만큼의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보아 당시 외교 통상차원에서 한때 특소세 폐지가 검토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업체의 특소세 인하 폐지 활동은 진흥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 함께 산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자원부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일등 공신은 산업자원부의 전현직 관계 공무원들로서 특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인사는 '80년대 초반에 이동훈 당시국장(차관 역임), 김순 당시과장(전 기계공업진흥회 부회장), 김철두 당시 사무관(현 국장)과 배후에서 크게 우리를 지원했던 홍성원 당시 청와대 비서관, 정홍식 당시 행정관(정보통신부 차관 역임) 등이다.

우리 업계 인사들로서는 삼성전자의 김창헌 부사장과 김일수 이사, 이미 고인이되신 LG전자의 김영달 당시 상무와 현재의 박찬용 상무 그리고 대우전자의 당시 박찬 상무, 본회 인사로는 김완희 전 회장, 이흥부 전 상무 등으로 그간 여러 선배들의 노고에 우리업체가 같이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향후 새천년에도 이를 거울삼아 우리업체가 총력 체제로 전자산업 진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우리 전자정보산업은 국내에서 성장선도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급세기에는 세계 선진 전자정보 산업국으로 우뚝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